

주요 국정홍보 ①(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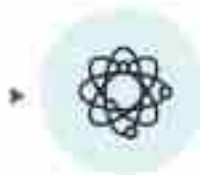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추진합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바로가기 >>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 도출

- 1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2 바이오헬스
3 첨단부품 소재 4 디지털 5 환경, 에너지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관리

- 산업맞춤 정보 제공 및 인재데이터 고도화
- 인재양성 3법 제정 및 학생중심 인재정책 성과관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자원체계(RISE) 구축

- 지역주도로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점주’ 체계를 구축·지원



글로벌(Glocal)대학 육성

- 대학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육성

교육·연구·훈련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고합니다.



▶ 학사운영 자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전면 개정



▶ 마이스터고2.0 추진을 통한
고숙련 실무 기술인재 양성



▶ 대학 연구소 총괄 관리·지원시스템 구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주요 국정홍보 ②(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요? >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교육 정책입니다.



“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마련 ”

< 유보통합 왜 필요한가요? >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보육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만3~5세): 교육부·교육청 | 어린이집(만0~5세): 보건복지부·지자체

< 유보통합 이렇게 추진됩니다! >

1단계 2023~2024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격차완화는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마련합니다.



교육바·보육료 지원 확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관의 교육·보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관리체계 통합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유보통합 이렇게 추진됩니다! >

2단계 2025~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

1단계 논의로 마련된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모습을
'국민안심', '다양', '자율'의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지역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운영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효율적인 영유아 교육·돌봄을
지역 중심으로 구현



핵심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1단계에서 마련한 방안을 활용해 단계적 적용

이를 위해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위원회는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합니다.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위 원 24명
- 정부위원(5)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 위촉위원(19)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주요 국정홍보 ③[전세사기 피해 근절대책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 2.2.  대한민국정부

전세사기는 뿌리 뽑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예 방



- ✓ 무자본 갇투자 근절
전세금 반환보증 약용 개선
- ✓ 단계별 자가진단 정보 제공
악성임대인, 시세, 세금체납 정보 등

피해 지원



- ✓ 이자부담 완화
저리대출 대환 신설 및 요건 완화 등
- ✓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등

단속 및 처벌 강화



- ✓ 전세사기 기획조사 연중 실시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의심사례 대상
- ✓ 전세사기 가담자 처벌 강화
중개사·감평사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주요 국정홍보 ④(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알려드립니다

노동개혁 Q&A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勞使 法治

노동자도 사용자도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함

노동관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노사 법치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약 300만명(가년 기준) 규모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조 운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높아진 위상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 권리 보장의 기본적 실천과제로서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역량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3 임금체계 개편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
근속연수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개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하는 일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임금이 직무의 난이도나 성과가 아닌 주로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Z세대에 너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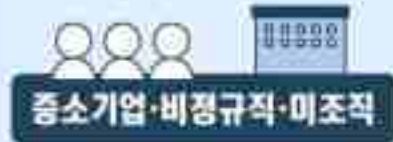
이에 누구나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중입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요?



대기업·정규직·조직

차별·불공정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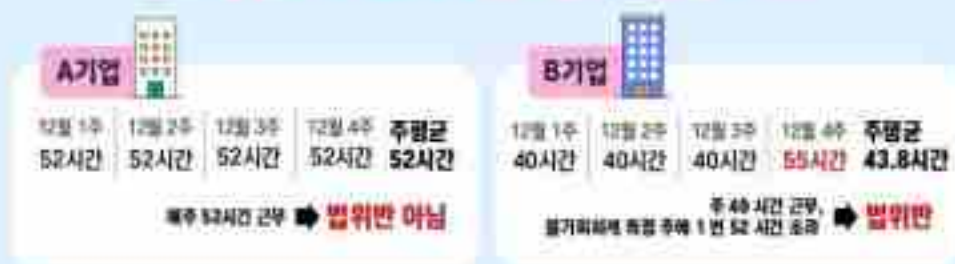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이동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보상에 차별을 받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하기 어려운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 생태계 전반을
상생과 연대의 구조로 바꾸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05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왜 필요한가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불합리한 사례



1주 단위 경직적인 규제와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다양화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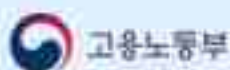
이로 인해 '공짜야근'과 같은 편법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공감대 속에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6(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

- 미디어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발전 로드맵
- 방송역사 고찰 및 미디어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사업
-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 마련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

- 방송 편성규제 완화·경쟁규제 개선
-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시장 선점 노력 확대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자원 확충

- 창작 허브, 해외 급차로 광고 규제체계 정비
- 방송통신발전기금 본담금 및 보조금 제도개선, 수신료 투명성 강화 국제 논의 지원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지원

- 제4차산업 융합인재양성사업 지원
- 위치정보 활용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지원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 미디어정책연구회 논의 등을 통해 정책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



✓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 KBS 및 EBS의 콘텐츠 제공 확대
- 공적운영 책임 평가 기관제약 수립



✓ 미디어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가 · 재심인 심의
- 알고리즘투명성위협화를 법적 기구로 설치
- 뉴스제공원거위명확화 설치 · 구성요건, 책임 명제화



✓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법 제정
- A급저미디어센터 2개 추가 구축
-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운영계획 수립



✓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

-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 재난 안전침의 다량 방송사 확대(30개 ▶ 35개)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 디지털 이용자 보호총괄계획 수립
- 디지털 플랫폼 안전 자율규제기구 지정 근거 마련



✓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 강화

-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분석 및 사업자 규제제제 정비
-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모니터링 등 강화



✓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해소

- 긴급구호 서비스 확대 - 유심미동전 당일 위치정보 제공
- 기업명 4자 제한이 유해방송 하지 방안 검토



✓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정립

- 디지털범죄 피해과 악악플 등에 보금 추진체계 마련
- 방송통신 정책제 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디지털폭력 피해자원을 위한 피해구제센터 설치



✓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디지털 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과 고지 강화, 다국간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병도 추진평가



✓ 산업현장 애로 개선

- 방송사업자 심사평가 등 간소화, IPTV, AR 등 디지털 방송서비스 기술지원
- 플랫폼 이용사업자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디지털·미디어 규범확립



✔ 디지털·미디어 국민 피해 관련 실태 파악



✔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 및 윤리 기반 마련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cc1335/223003866290>

주요 국정홍보 ⑥(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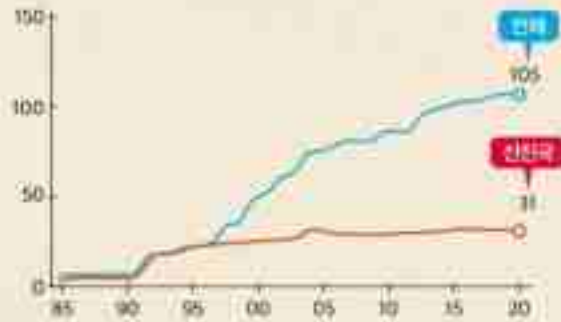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세계 105개국 도입!

재정준칙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없는 재정준칙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재정수지

GD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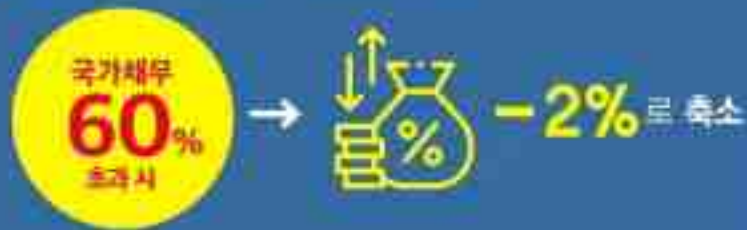
이내로 관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2년 9월,

우리도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습니다.

01 관리수지 한도 -3%를 규정



02 준칙한도는 법률에 명시하고, 법률 국회 통과 즉시 시행

03 위기 시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칙 예외사유*도 규정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 발생 시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 재정준칙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재정준칙 재설계안을 발표,
이는 환영할 만한 조치... 관리수지를 활용하고
법률에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강화
(2022.9.)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
(2022.9.)



재정준칙 법제화 시 국가신용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GDP -3%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가능한 범위(GDP -3%)** 내로 유지
신평사들이 우리 **채무비율**을 예측하기 용이

01

대외신인도
상향 가능



02

외환채
금리 하락으로
이자부담 완화



03

기업의
해외조달비용
개선



**현재 재정준칙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출국회 논의 중
박대홍 의원 발의



재정준칙의 법제화!
미래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주요 국정홍보 ⑦(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성적)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⑧(수출·투자책임관 본격 가동)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 본격 가동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 2.9.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부처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동향과 지원 계획,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어려움 극복과 수출 반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9(지방시대를 위해 중앙 권한 이양)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10.

대한민국정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합니다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산업 등 6개 분야 57대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합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 02. 10.(금)



주요 국정홍보 ⑩[화물차주 보호·처우 개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일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차주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합니다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
개인운송사업 신규 허가



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
차량 감차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여
운송사의 갑질 등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겠습니다.

* **보호의 사물권** 미변환, 지입 차량 변경비·
영의 이전비 등 부담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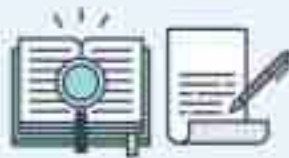


지입 계약 시
차량 실소유자(화물차주)
명의로 등록

* 기존 지입 차량도 영의 이전 의무 부여

표준운임제 도입

안전운임제를 차주 보호와
화주 자율 계약의 표준운임제로 개선합니다.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



- 기존 안전운임제 전면 개편
-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 화물차에 적용
- 3년(~25) 일몰제로 도입

열악했던 화물차주 처우개선

유가변동에 맞춰 **화물차주 운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도입 및 **화물차 휴게소** 등에 대한 투자,
차주 대상 **복지사업 확대** 등 **운행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화물차 휴게시설 및
차고지 확충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화물차주
복지사업 확대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화주·운수사로 확대하겠습니다.

운행기록장치 정기 제출
의무화 (DVR장치 25톤 이상 화물차)

화물차주에게 과적 요구시 과태료 부과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할 경우 차주 경감

교통안전
모니터링

낙하사고
(판스프링 등)
처벌강화

과적에 대한
사용자
책임강화

화물차
교통안전
관리감독 강화

화물 고령 도구 이용 방지 조치 의무화
불법 튜닝 차량 운행 금지

불법개조, 발생주차
등 관리 권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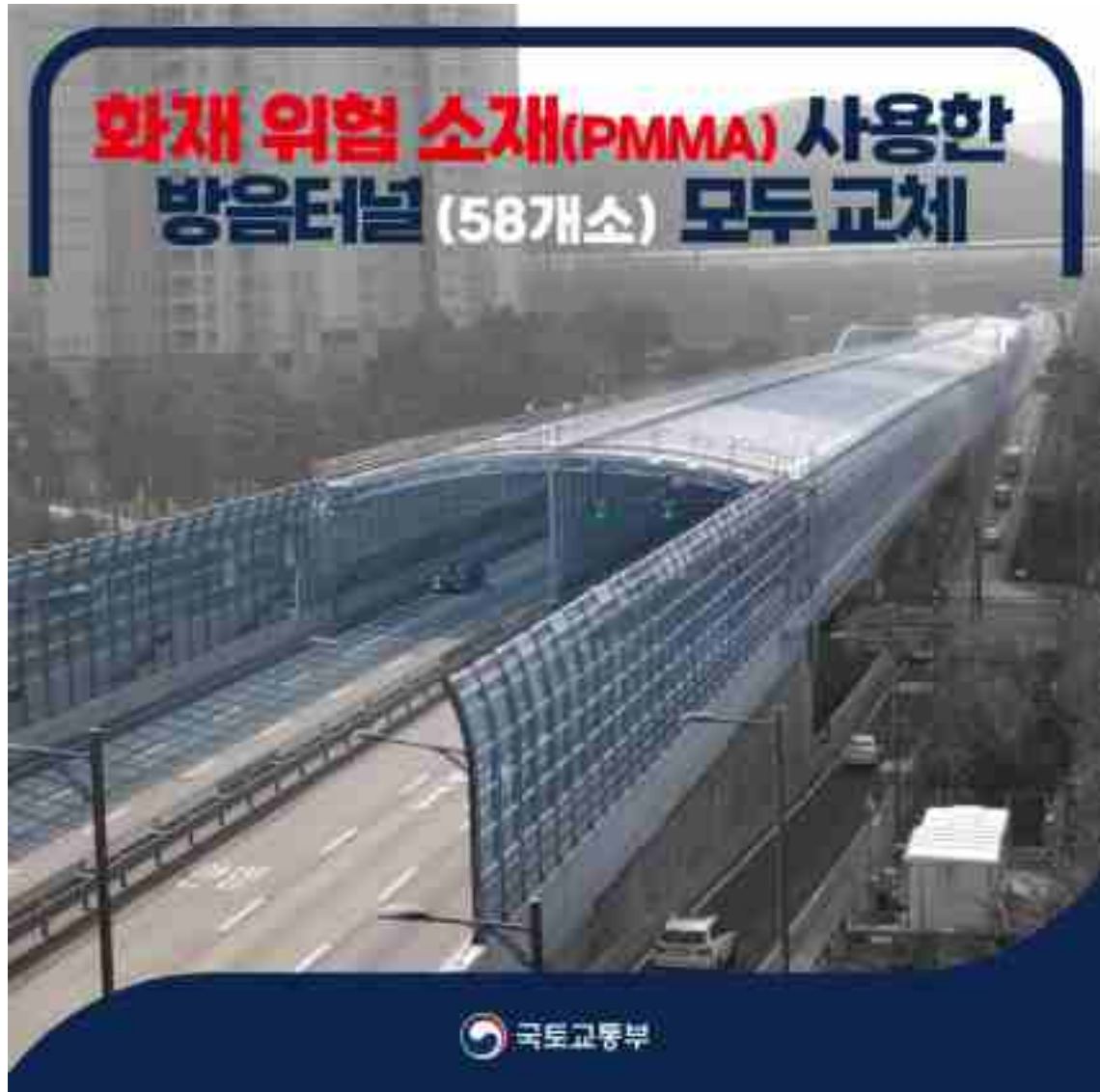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들이 개선되어**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⑩[화재위험 소재 방음터널 교체]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고속도로·국도 올해 말까지 지방도로 내년 2월까지 모두 교체

개선 전

가연성 소재 현황

방음터널	58개소 (34%)
방음벽	1,704개소 (14%)
불붙는 온도	280°C

* PMMA: 폴리메타크릴산에틸

개선 후



방음터널

고속도로·국도
22개 교체

지방도로
36개 교체



방음터널 교체 전 임시조치



소화설비



CCTV



잔압차단시설



피난대피공간



방음벽

주거시설에서 20m 이내 위험성
검토하여 추가 교체

정기안전검사 대상 포함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의무화

개선 전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미 포함

개선 후

- ✔ 「시설물안전법」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 ✔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 소방안전관리자 의무화 제도로 개선
- ✔ 소방, 의료 등 화재대응 합동 훈련 실시 및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 강화

화재위험 노후 화물차 관리 등 방음터널 내 사고발생 요인 최소화



- ✓ 화재 위험 노후화물차 관리 철저, 운행정지 명령
- ✓ VMS, 노면표지 안내, 속도제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 ✓ 도로 주변 개발 시 소음 영향이 적은 자족·업무시설은 우선 검토

**방음터널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②(국방 중기계획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간부(장교, 부사관)·군무원 증원을 통한 전투력 강화('23년~'27년)

간부(장교, 부사관)

작전·전투분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 확보

'22년 20.1만 명 ➡ '27년 20.2만 명
(상비병력 40.2% ➡ 40.5%)



군무원

신기술·신명역 확보,
비전투 분야 등에 군무원 보강

'22년 4.5만 명 ➡ '27년 4.7만 명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킬 체인 (Kill Chain)

중요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 잠수함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을 탐지,
요격하여 주요시설 보호
* 이지스 구축함, 장사정포 요격체계,
한국-II, L-SAM 등



대항응징보복 (KMPPR)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 응징,
보복하여 파괴
* 특임어단 능력보강, C-130H·UH-60 성능개량 등



감시정찰 / 지휘통제체계

3축 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체계 발전
* 다수 정찰위성 전역화,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
다출차영상융합체계 전역화



국방혁신 4.0 이행, 한국형 3축체계 구축으로 국방대비태세 확립

핵·WMD 대응

- 합참 핵·WMD 대응센터 본부로 확대 개편('23년)
- 전략사령부 창설('24년)
-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25년)



한국형 3축체계

- 육군 고위력미사일, 공군 미사일방어 체계, 해군 정보교-III 잠수함 등 운용성 향상을 위한 인력 편성



국방혁신 4.0

-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 관련인력 편성으로 확장된 전장 대비 및 기반 조성



전투력 보강

- GDP-해안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 보강
- 예비전력 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 인력 증가 편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국방 R&D 확대·방위산업 육성

제대·고도별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 확보 등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한 전력체계 구축

* HUAV, MUAV, 통신중계드론, 개인전장가시화체계



무인체계 보강 및 관련 핵심기술 준비

* 정찰용무인수상정, 무인수색차량,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변화하는 미래전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

* 첨단무기 연구개발,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 등 15.7조원 규모



약진 중인 국내 방위산업 및 방산수출을 돕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방산컨설팅 등 8,500억원 규모



미래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병영환경 조성

급식

- 장병 선호를 반영한 메뉴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2) 11,000원/일 → (23) 13,000원/일 → (24) 14,000원/일 → (25) 15,000원/일

피복

- '23년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
-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



병영 생활관

-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확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개선



간부들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 수당 등을 개선하고
심소요 대비 부족한 활동비 인상
- 감사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부를 위해
주거보조비 신설 등 실질적인
주거지원 제공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국방 AI를 선도하는 국방 AI센터 창설 추진('24년)
- 군 AI 전문인력 양성, 양질의 국방데이터 확보 등
국방 AI 기반 마련 * AI 전문인력 간부 1천명 양성(~'26년)
-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 확대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확충
* 마일즈 장비, AR·VR 가상훈련체계 등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병사

'25년까지 병 봉급 150만 원,
내일준비자금 월 55만 원으로
인상하여 월 최대 205만 원 지원



간부(장교, 부사관)

단기복무 간부들의 자금심 고취와 간부자원을 제고할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장교



부사관



변화하는 전장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고효율·최적화 전력체계 구축

지상

기동작전능력 향상, 중심지역 타격능력 강화 등
전력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 추진

- * K2전자, 차륜형장갑차
- * 대포병탐지레이더-II
- * 230mm급다련장



해상 상륙

다영역 해양작전 능력 향상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 강화

- * 3,200톤급 호위함
- * 상륙기동함
- * 검독수리 고속정



공중

한온 전투기 성능개량으로 작전수행능력 고도화
장기운용 전투기를 국산전투기로 대체

- * F-15K 및 KF-16 성능개량
- * 4.5세대 KF-21 국산전투기



주요 국정홍보 ⑥(친환경차, 자율차 R&D 지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친환경차 기술 확보

2293억원

- ✓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개발
 - 주행거리, 충전 속도, 내구성 등 개선
- ✓ 내연기관 고도화
 - 연비 향상



자율주행·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1383억원

- ✓ **자율주행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
 -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목표
- ✓ **데이터 구축·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 디지털전환(DX) 달성



기반 구축, 사업화 지원

1003억원

- ✓ **시험평가장비 구축**
 - 지역 부품업체 공동 활용
- ✓ **중소부품업체 기술개발 역량 제고**
 - 인증, 시제품 제작, 해외마케팅, 이차보전 등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315억원

✓ 미래차 혁신인재 확보 지원

-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등
기업 수요 중심



주요 국정홍보 ㉞(달라지는 외환제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

연간 수입액 100만 달러 → 연간 **5천만 달러**



외환제도
개편 방향

국회재정위

기업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제도 폐지**
정기보고 내용 간소화

외환제도
개편 방향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對고객 일반환전 수행 가능한
금투사를 대형증권사로 확대

현재 증권사 4개사 → **대형증권사(9개社)**

금년 상반기 중
시장형 규제 개정

국민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시키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주요 국정홍보 ㉞[이산가족 문제해결 방향제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 제4차 |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2023. 2.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2025년까지 3년 간 추진할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 및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2021년)에서 파악된
이산가족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 및 이산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
이산가족 역사·문화 기록·보존사업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①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대면·화상상봉을 재개·확대·정례화하고,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영상편지 등 소식 교류를 북한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②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생사확인·송환 등을 추진,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③ 이산가족 교류 기반 확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④ 고향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국내외 공감대 확산

세대 공감형 이산가족 위로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산의 문제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⑩[공공요금 최대한 상반기 동결]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윤석열 대통령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2.15.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하고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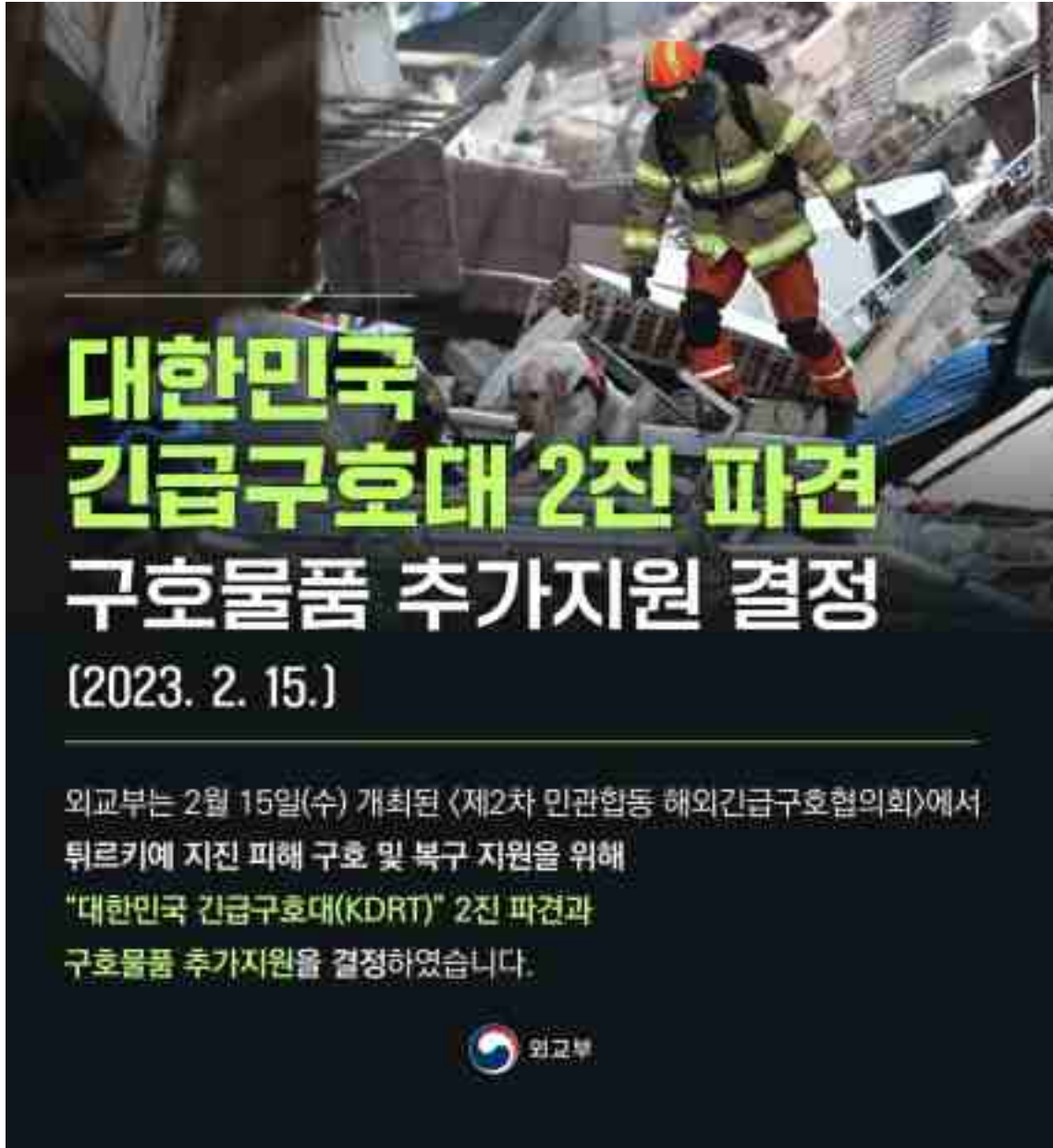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지자체, 민간기업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요.




주요 국정홍보 ⑩(튀르키예 긴급구호대 2진 파견)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 파견
구호물품 추가지원 결정**
[2023. 2. 15.]

외교부는 2월 15일(수)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및 복구 자원을 위해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 파견과
구호물품 추가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외교부

긴급구호대 2진 파견

(2월 16일 오후 출발 예정)

2명

외교부



10명

KDRT
의료팀



5명

KOICA



4명

민간긴급
구호단체

▶ 총 21명 규모, 민관 합동으로 구성

긴급구호대 1진은 임무를 마치고 2.18. 서울에 도착할 예정

민관합동 구호물품 추가 지원

(군 수송기 2대 / 민항기편으로 전달 예정)

텐트 1,030동 민간(780동) 정부(250동)

담요 3,260장 민간(1,000장) 정부(2,260장)

침낭 2,200장 민간(2,200장)



주요 국정홍보 ㉞(돌봄 사각지대 해소)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여성가족부, 마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2.16.)



돌봄 사각지대 해소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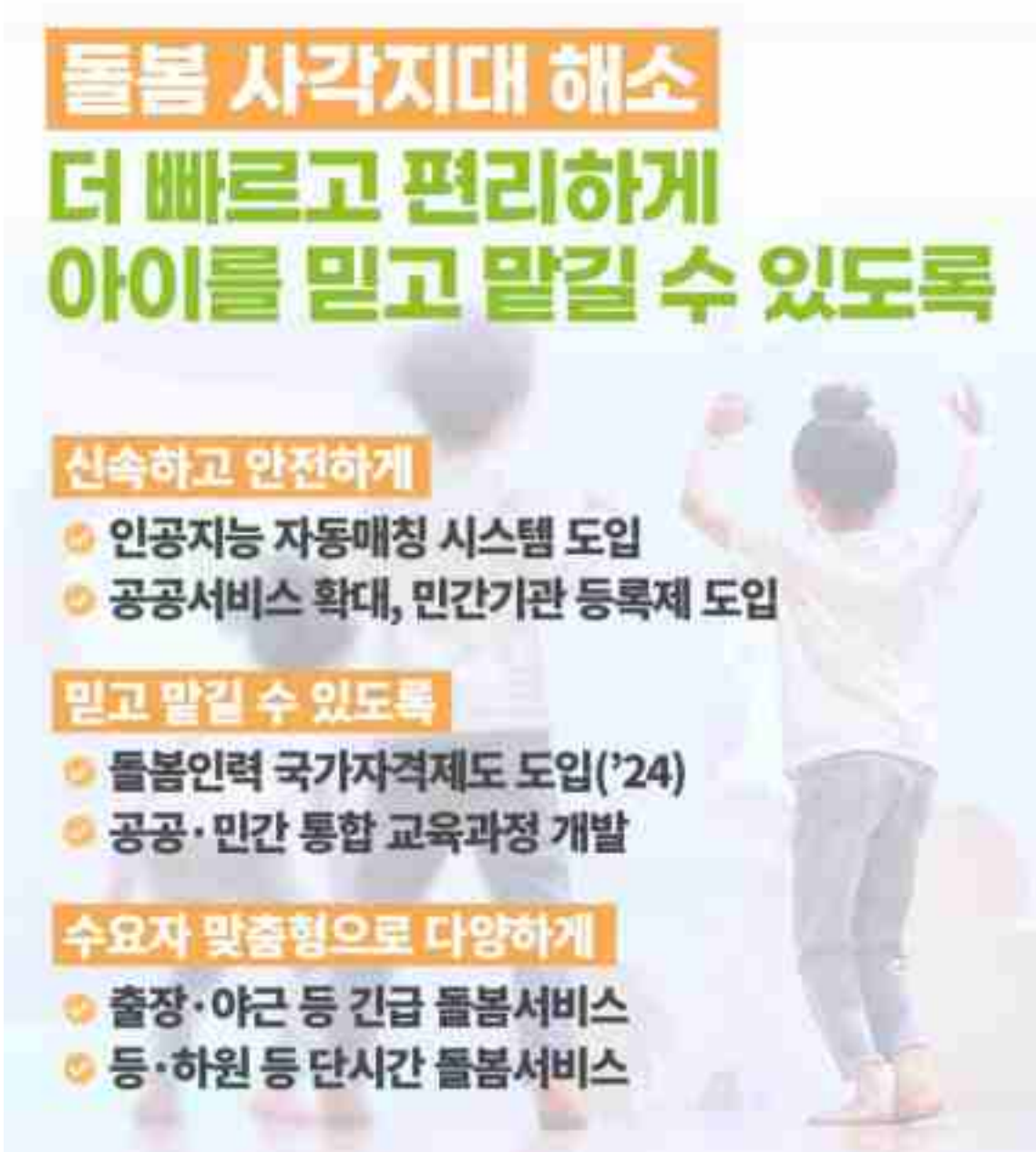
- ① 인공지능 자동매칭 시스템 도입
- ② 공공서비스 확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믿고 맡길 수 있도록

- 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24)
- ② 공공·민간 통합 교육과정 개발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 ① 출장·야근 등 긴급 돌봄서비스
- ② 등·하원 등 단시간 돌봄서비스



주요 국정홍보 ㉞(스포츠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 2023. 2. 14.(화)

미래 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을
2027년까지 100조 원으로 육성

장애인 체육인들이 은퇴 후
스포츠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창업지원 정책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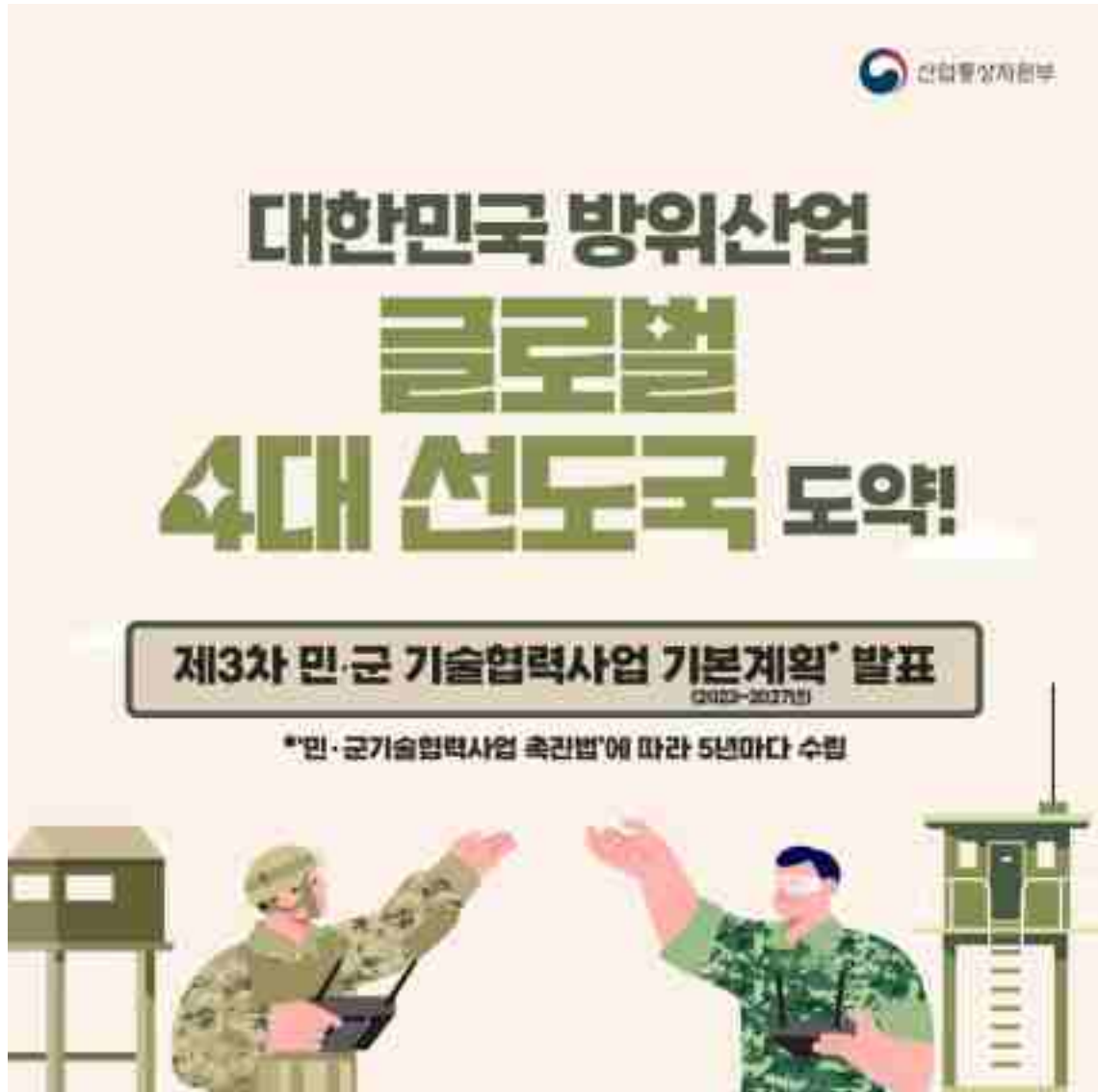
인공지능(AI), 챗GPT 접목 과학적 훈련 지원 등
밸류업 스포츠 총총히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반디집(체육센터) 건립 등
누구나 차별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 국정홍보 ④ [방위산업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R&D) 투자 대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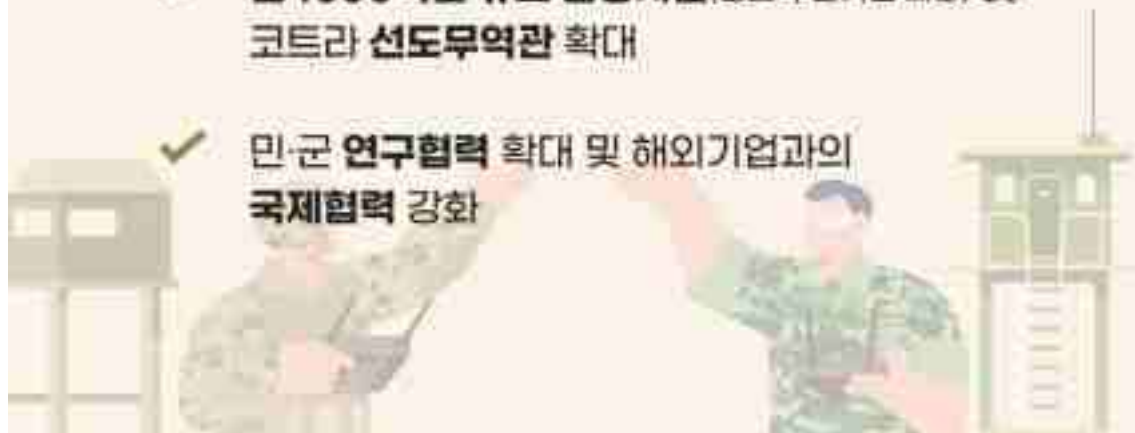
- ✓ 16대 중점기술분야* 중심 2조원 규모 R&D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 전문가협의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연계성을 고려해 선정
- ✓ 민·군 기술협력에 1조 5000억원 이상 투자
- ✓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 강화
- ✓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민·군 위성 활용 등을 통한 우주 산업화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

- ✓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2027년까지 2000억원 투입)
- ✓ 방산 소재부품 기업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신규 지정
- ✓ 민·군 기술 상호이전 및 사업화 촉진
- ✓ 연 3000명 이상 인력양성(방산 기반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민·군 기술협력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 ✓ 에너지·플랜트·정보기술(IT) 등의 산업과 연계 및 협력 강화
- ✓ 연 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중소 수출기업 대상) 및 코트라 선도무역관 확대
- ✓ 민·군 연구협력 확대 및 해외기업과의 국제협력 강화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민군 기술협의회 위상 격상 등 **법정부 협력 강화**
-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
⇒ 해외진출 등 방산 중소기업 기업 밀착 지원



주요 국정홍보 ④(2022 국방백서 발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2022 국방백서」

「2022 국방백서」의 특징

25번째 백서인 「2022 국방백서」는 現 정부에서 최초 발간되는 백서로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정책 방향과
그간의 성과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67년 최초 발간, '88 ~ '00년 매년 발간, '04년부터 격년에 발간

- ✓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
- ✓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태세 강화 노력과 강력한 대응의지 강조
- ✓ ‘글로벌 중추 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 분야 노력 반영
- ✓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정책과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기술

주요내용및변화1

적 표현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020 국방백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자산을 위협하고 침략하는 세력
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2022 국방백서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주요 내용 및 변화 2

한국형 3축체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충 관련
방향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2020 국방백서

핵·WMD 대응체계
(전략적 억제체계 KAMD)



2022 국방백서

한국형 3축체계
(Kill Chain, KAMD, KMPR)



미 확장억제 실행력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SCM을 통해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2020 국방백서	2022 국방백서
확장억제 협인체 (DSIC, EDSDS 등) 개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억제 협인체 운영 성과 - SCM 공동성명 내 확장억제 관련 내용
맞춤형 억제전략 개념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억제전략 개정방향 및 추진계획 - TTX 정례화 합의 및 추진방향
TTX 개최 성과	美 전략자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자산 전개 빈도·경도 증가

주요내용 및 변화 4

전구급 연합연습체계 발전

상당기간 축소·조정 시행되어온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명칭 변경과 함께 정상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복원하여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 나가는 군의 노력도 포함하였습니다.



국방혁신 4.0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경쟁 우위의 군사능력을 갖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의 주요 추진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 '2022 국방백서' 전문은 2월 16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3월 중까지 배포 예정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주요 국정홍보 ㉔[한우수급안정대책 마련]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하락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하여

**농협, 한우협회,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우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 ①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 ②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평시 20% 낮은 가격으로 판매,
비수기에 최대 50% 할인행사 실시
- ③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

한우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① 구제역 백신접종 창장국 지위획득과 함께
한우 수출 44톤 → 200톤까지 확대
- ② 홍콩 시장 공략: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등과 함께
홍콩 수출 프로모션 대폭 확대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 추진, 수출 시장 개척
- ③ 한우 수출 협의회 구성으로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저등급 냉동육 수출 시장 개척

한우 농가경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①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높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 자금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 50% → 60%로 확대,
배합 사료 가격 인하 지속 유도
- ② 중소농가의 사료자금 우선 지원 농가기준을
소 150마리 이하 사육 →
소 100마리 이하 사육 농가로 변경
- ③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평가를 거쳐
경영안정을 위한 대환자금 (농가당 최대 20억원 금리 1%) 지원.
그 외,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및
중소농 출하 시 공판장 우선 출하권 부여 추진

사육마릿수 감축 및 중장기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
- ②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농가에
암소 감축 물량 5만 마리 배정
- ③ 시장 친화적,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불안 3년전부터
수급을 관리하는 선제적 시스템 제도화

한우 유통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①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
소매점 간 가격 경쟁 유도
- ② 운송비와 가공비 절감을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23년 총 6개소 운영 예정)
부분육 경매 도입('23년 상반기 내 시범운영 예정)
- ③ 평균 납품가격 공개,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 추진

* 축산물 유통의 편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완료





정부는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 촉진을 실시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체계를 개편해
한우 산업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국정홍보 ㉔(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논의의 2.17. 대한민국정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드론 테러' 막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테러특공대를 추가로 창설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23년 중점 추진 계획

- ❑ 취약분야 점검, 조기 경보시스템 가동 등 9개 과제 추진
- ❑ 울산·강원·충북 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
- ❑ 국가중요시설에 '안티드론 시스템' 단계별 도입



주요 국정홍보 ㉔[신성장 4.0전략 본격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발표 2.20.

초일류국가 도약 목표 '신성장 4.0 전략' 본격화
기술혁신, 미래분야 투자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별 세부 대책을
연내 30개 이상 추진합니다.

-  도심항공 모빌리티 상용화(~'25)
-  돌봄, 교육, 의료 등에 AI 도입 프로젝트 마련(~'23.6.)
-  은실가스 '넷제로 시티' 10곳 선정(~'23.9.)
-  전기 생산·충전 주유소 500곳 이상 확대(~'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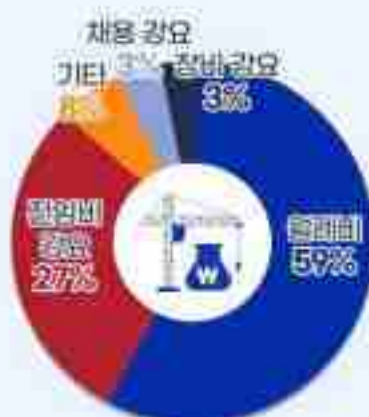
주요 국정홍보 ㉞[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금품 요구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불법행위 지속

290개 업체 / 1494곳 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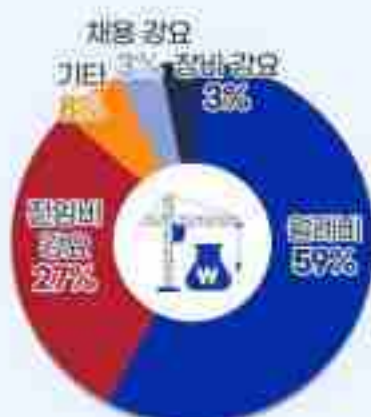
불법행위 신고



지역별 신고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금품 요구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불법행위 지속

290개 업체 / 1494곳 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발생



불법행위 신고



지역별 신고

불법행위 사례 1

타워크레인 월레비 거부하면 태업으로 공사지연



타워 크레인

- 건설 노조 소속 조종사가 '월레비속행비승용권' 요구
- 거부 시 인양 속도 늦추는 태업으로 공사지연



원래

즉사: 월레비를 위법하게 수취 시 강요·협박·공갈죄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보완: 건설기계 조종사 관련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자에 대한 제재(면허 취소) 근거 신설

불법행위 사례 2

노조 전임비 월 600만원 요구



관리감독

·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계약 때 도장 한번만 찍고 월 600만원 요구



업체

특사: 협박 등 요건에 맞지 않는 '유급 근로시간면제' 강요

보완: 단체협약 상에 면제 한도 초과 규정 등 위법 사항
'온라인 노사 부조리센터'에 신고 시 시정명령 등 적극 조치
- 노조의 금품 강요 행위에 대한 규율 검토

불법행위 사례 3

소속 조합원으로 채용 요구



A노조

- 아파트 공사 착공전부터 자기 소속 조합원으로 채용 요구
- 차량과 화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와 민원 유발로 압박



건설사



B노조

- 특정인을 소속 조합원으로 채용 요구
- 거부 시 동전 수백 개를 공사현장에 떨어뜨려 방해



건설사

즉사: 강요·협박·공갈죄 등으로 처벌

보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

근절방안 1

익명 신고센터 설치하고 수사·구속 등 단속 강화

- ✓ 만·관·공 공조 범정부 역량 집중
- ✓ 경찰청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 송치, 20명 구속
- ✓ LH, 건설 노조 대상 첫 직접 형사고소(19)에 이어
민사조치(손해배상청구) 2월 중 추진
- ✓ 전문건설협회, 회원사 대신 43건의 불법행위 고발 대행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 영세한 회원사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겠습니다.



근절방안 2

조종사 면허 정지 등 불법행위 즉시 처벌

- ✓ 채용 강요, 금품 강요 등 불법행위 즉시 제재·처벌
- ✓ 준법 투쟁의 발みが 되는 산업안전규정의 합리적 조정
- ✓ 대책 발표 이후 건설기계조종사의 월례비 요구에 대해
「국가기술훈위유지」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근절방안 3

불법적 관행에서 **건설근로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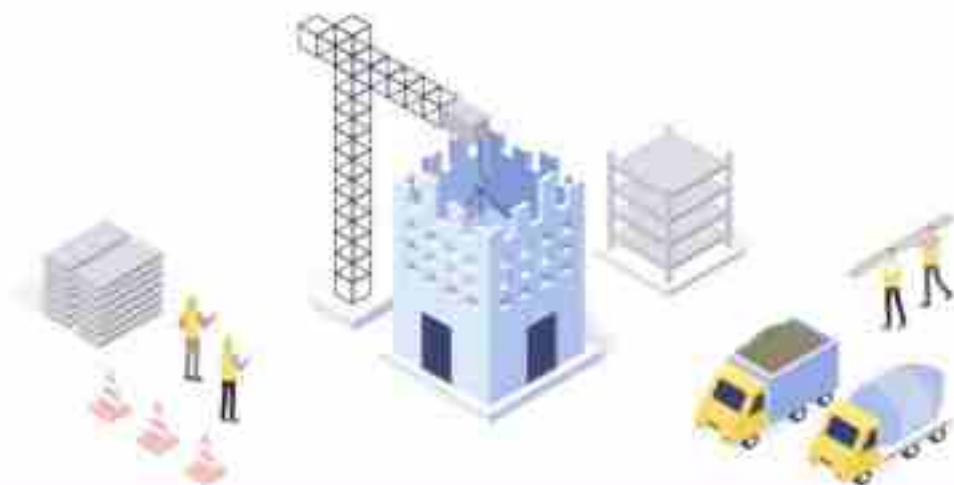
- ✓ 단속체계 상시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 실시 등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대금 직접 지급 사업장 확대
- ✓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편의시설 확충

임금 체불로 이어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공사대금 체불도 엄격하게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15.2%)로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산업입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법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신성장 제조업



주력 제조업



신수출동력 확충 - 12개 분야

수주전략산업



신수출 유망산업

농수산물(농식품, 수산식품, 스마트팜)

디지털산업(ICT서비스, 콘텐츠, 에듀테크)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범부처 협업 통한 수출 드라이브

- ⊕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
- ⊕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 ⊕ 수출 지원기반 확충
- ⊕ 무역금융 지원 확대
- ⊕ 마케팅 및 인증지원 강화
- ⊕ 수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 기조하에 올해
범정부 수출지원사업 예산 1조 5136억원과
무역금융 362조 5000억원 지원,
부처별 수출목표 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등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2023년 농식품분야 수출확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2023년 농식품분야 수출 확대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로 농산업 혁신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2월 23일 제4차 수출전략회의 '원팀으로 다시 만드는 수출강국 대한민국'

장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해외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2027년까지 수출 규모를 2022년의 2배 수준인 230억 불까지 늘려
대한민국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유통·물류 효율화
-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으로 수출성장 동력 확보
- 농식품 전후방산업(스마트팜, 농기재, 동물용의약품 등)의 수출 산업화로 외연 확대
- 민간 합동 수출 협의체 운영, 자금지원 등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주요 국정홍보 ㉞(K-콘텐츠 수출전략)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Expansion

북미, 유럽, 중동 등 신시장을 적극 개척합니다

- ④ 콘솔게임 육성, 해외 마켓 판매 통한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신시장 창출
- ④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지원,
K-팝 공연 등 점점 확대로 수요 창출해
UAE, 사우디 등 '제2의 중동 봄' 선도

Extension

K-콘텐츠의 산업영역을 확대합니다

- ☑ 웹툰 플랫폼과 콘텐츠의 공동 해외 진출 지원,
웹툰 IP 활용 강화
- ☑ K-드라마 영화 예능 확산을 위한 디딤돌로서
글로벌 OTT와 전략적 제휴
- ☑ 국내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K-콘텐츠 수출전략

Effect

연관산업 프리미엄의 효과를 확산합니다

- ☑ K-콘텐츠 연계 마케팅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브랜드가치 향상
- ☑ K브랜드 해외홍보관 활성화 및 K-박람회 개최
- ☑ K-팝 가수 협업, 캐릭터 IP 활용 식품 등
콘텐츠 IP를 활용한 협업상품 개발 지원

지정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 '2022 K-콘텐츠의 세프닝'

K-콘텐츠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반을 강화합니다

- ④ 챗GPT,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개발·활용 강화
- 'K콘텐츠 메타버스 월드' 조성
- ④ '24년 정책금융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원 조성
- ④ 해외 원스톱 지원 거점 '27년 50개소로 확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불 달성과
세계콘텐츠 시장 4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AI기술 활용 디지털교육 청사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왜 추진 하나요?**

- ①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의 역량 및 학습 속도에 최적화된 학습 기회 제공
- ②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구현

[추진방안 알아보기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①**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적용학년**

(‘25년) 초3~4, 중1, 고(공통·일반선택 과목) → (‘26년) 초 5-6, 중2 → (‘27년) 중3

✓ 적용과목 : 수학, 영어, 정보 교과 우선 도입

▶ 학부모 및 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 수렴 후 5월 최종 확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②**T.O.U.C.H 교사단을 중심으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T.O.U.C.H 교사단 선발·연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 그룹을 선발하고 집중 연수
T.O.U.C.H (터치, Teachers who Upgrade Classroom with High-tech)

운영 규모 ('23년) 400명 → ('24년) 800명 → ('25년) 1,500명

✓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교원 대상 연수

T.O.U.C.H 교사단의 동료 연수 실시 및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협력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합니다**

- ✓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운영
- ✓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보급
- ✓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과의존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④

**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 ✓ '23년 7개 시범교육청, 300개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도출

규모 '24년 17개 교육청, 700교로 확대

- ✓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선도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⑤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확보
- ✓ 학교 유·무선망 점검 및 보강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oe.go.kr>



주요 국정홍보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승격)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정부조직법 개정안

향후 국무회의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 공포

약 3개월의 준비 기간

6월 초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창설 62년만에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훈부 승격이 이뤄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그간 국가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불명확한 입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는 높아지는 위상만큼
앞으로 3개월 동안 국가보훈부로의 출범을 면밀히 준비하여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④[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로봇산업은?



시장 규모는(세계)?

282억 달러 (2021년) → 831억 달러 (2030년)

연 13% 성장

고용 전망은(국내)?

3만 1000명 (2021년) → 3만 7000명 (2030년)

1.2배 증가

규제혁신 방안 ①

로봇의 **이동성** 확대

Mobility



-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 신설 (지능형로봇법 개정)
- ⊕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 ⊕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 완화
⇒ 공원 출입 가능
- ⊕ 자율주행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영상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
- ⊕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추진 등

규제혁신 방안 ②**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 ⊕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법 등록기준 개정
- ⊕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 마련
- ⊕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되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추진
- ⊕ 재난안전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

규제혁신 방안 ③**사람과 협업·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

- ⊕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 마련
- ⊕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반영
-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별도 보험 수가화 추진

규제혁신 방안 ④

새로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
- ⊕ 로봇 사고에 대비해 보험과 이력 관리체계 구축
- ⊕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 ⊕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
- ⊕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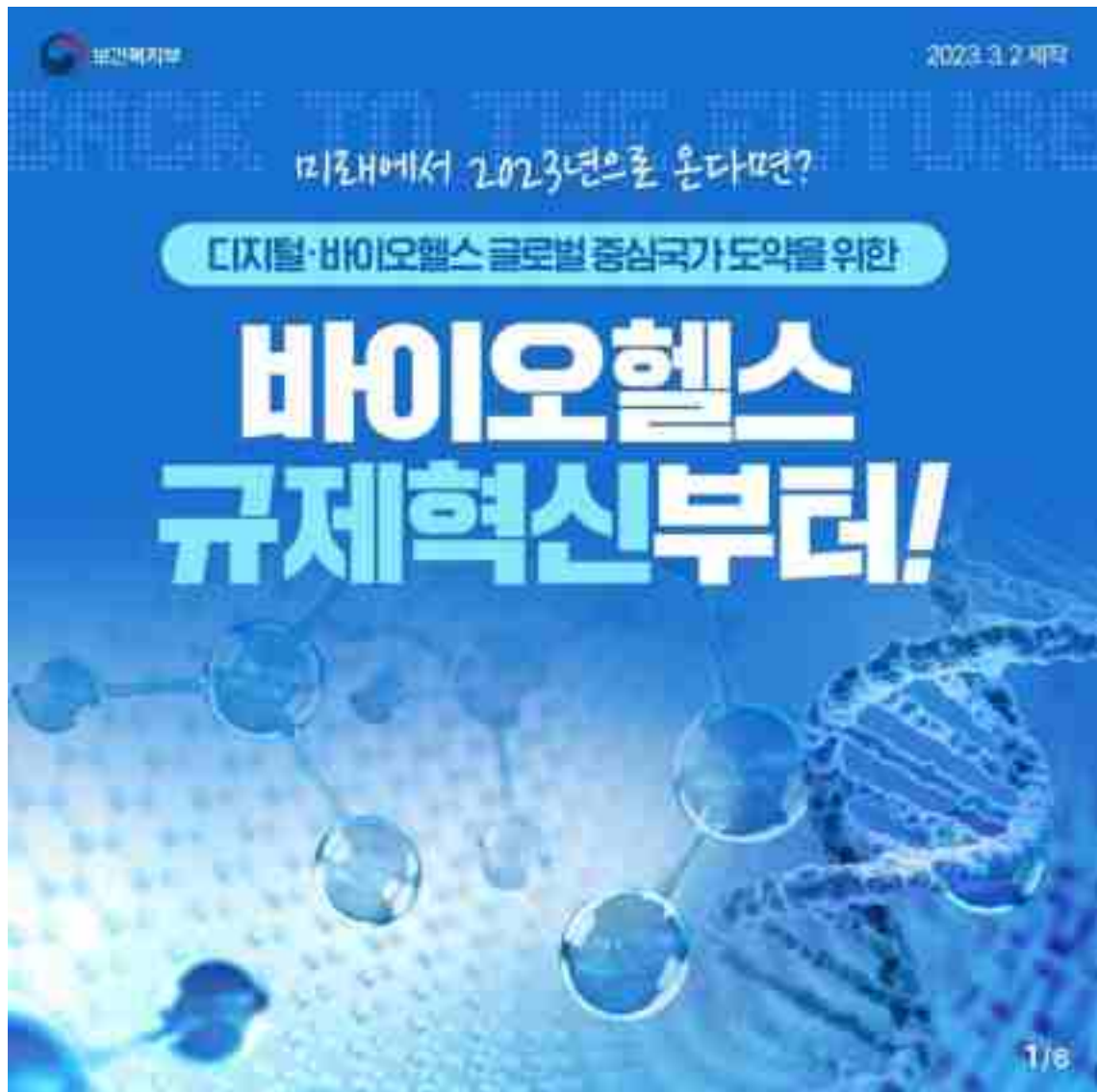
정부는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내년까지 39개 과제(76%)를 개선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규 과제를 발굴·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요 국정홍보 ㉔(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질병 예방과 관리,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지금은

식약처 인허가 이후, 시장진입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에 장기간 소요

앞으로는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시장에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단기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제도(2023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유예 확대(2024년) 검토 추진
중장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한시적 비급여 선사용 검토(2023년~)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치료기기
활용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환자의 활용도에 따라 임상적 효과성·경제성 차이가 발생*하여,
기존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 곤란

* (예시) 환자가 모바일 앱을 설치만 하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치료 효과가 낮아져, 건강보험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앞으로는

디지털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2023년)

* 건강보험 등재 절차, 보험 수가 결정, 사용현황 관리 등

암·희귀질환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더 빨리 전달하겠습니다.

지금은

식약처 허가 이후, 심평원 평가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까지 210일 소요

앞으로는

암·희귀질환 치료제로 대체 약제가 없으나
개선 효과가 충분한 약제는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완료(2023년~)

글로벌 공동 임상시험 등에 대응.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임상시험 시장 규모 증가*가 전망되어,
새로운 접근방식을 고려한 지침 필요

*비대면 임상시험 시장은 2021년 88억 달러에서 2026년 142억 달러
규모로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Medi-Tech Insights)

앞으로는

민관 협의체 구성,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2023년~)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에서 2023년으로 온다면?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지금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앞으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2023년~)

※ 의료취약지·사각지대 우선 추진
1차 의료기관·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서비스 혁신 및 의료 미디어터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제3자에게 **개인의료정보** 직접 제공 제한

앞으로는

본인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관련 기관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2023년~)

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질환 대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은

임상연구 대상자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로 제한

앞으로는

임상연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추진(2023년~)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임상연구 심의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위험 임상연구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식약처 검토·승인 개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와 식약처 검토를 동시에 개시하여,
심의기간 단축(2023년)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㉞(늘봄학교 3월부터 운영시작)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늘봄학교 시범운영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 30개교

- 이른 시간 등교에도 독서교실,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 운영

대전광역시교육청 20개교

- 1학기 동안(3~6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새봄교실」 운영

경기도교육청 80개교

- 지원형(일반학교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나누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시범운영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라남도교육청 43개교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기초학력·지역특화·문화예술 등
「미래형·전남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41개교

- 농·어촌지역(농·어번기 저녁돌봄 집중 제공 등),
도시지역(아침·오후돌봄 확대 등) 특성에 적합한 모델 운영

※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주요 국정홍보 ㉔(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가상자산 이용, 통장협박 등
**새로운 유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금융위원회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정과제 63



- 가상자산, 선물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 보이스피싱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 유형에 대응합니다.
- 은행권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대응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 ☑️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요청한 보이스피싱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305	599	414
금액(억원)	82.6	163.6	199.6

- ☑️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점차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범인 계정 정지를 요청하지만,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
-  피해자가 직접 범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계정 정지 요청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지만, **수사를 하는
동안 범인은 가상자산을 이미 현금화**
-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가상자산 전송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피해금 추적이 사실상 어려움**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보이스피싱법)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상자산 피해금 현금화에 대응합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전송 시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거래소마다 다른 숙려기간을 동일하게 도입하여 일정기간 피해금을 보존합니다.

최초 원화입금 시 72시간 · 추가 원화입금 시 24시간



금융위원회



노면노리면 노할 중 피해입법 추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피해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간 경우
신속하게 피해금 완급이 가능해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00페이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00페이(선불업자)를 통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



피해자가 피해금 송금 후 해당 사기이용
계좌에서 00페이(선불업자)를 통해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

2022년 4월 중 시행방법 추진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하여 피해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통장업박 유형에도 대응을 강화합니다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타인명의 계좌로
임의로 금전을 입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



자영업자 계좌
지급정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합니다.

다만,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현금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



ADA3년 4월 중 시행입법 추진

통장협박을 당했을 때 **구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영업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통장협박 유인이 낮아져 피해사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의심거래가
탐지되었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업무시간 외 피해 의심거래 탐지 시**
은행마다 서로 상이한 대응을 하는 상황

시스템 개선 등 조치사항을 시행

은행은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감소가 기대됩니다!

